

西歐民主主義가 韓國社會에 미친 影響 : 教育

李 仁 浩

I. 民主主義教育의 基礎

III. '韓國的 民主主義'와

II. 教育의 土着化와 民主主義
教育의 實狀

教育의 退行

6·29 선언 이래, 특히 지난 몇달 사이에 韓國의 文化界에서 일고 있는 주목할만한 現狀 가운데 하나가 教育과 民主化의 문제를 연결지어 다루는 출판물들의 속출이다. 대부분이 理論書이기 보다 教育現場의 체험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간행물들은 教育이 民主化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자명한 듯 하면서도 오래 잊혀져 왔던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동시에 民主化를 향해 가는 道程에서 教育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혀 왔는가에 대한 생생한 證言이 되고 있다. 哲學의 빈곤, 表面的 구호와 現實的 내막 사이의 乖離, 質的 成長과 量的 成長 간의 불균형, 目的과 手段의 顛倒現狀 등 한국의 民主化過程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教育의 領域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며 그러한 문제들의 뿌리는 매우 깊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I. 民主主義教育의 基礎

韓國에서 自由民主主義를 理想으로 하는 教育이 제도적으로 體系化되고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解放後 美軍政治下에서였다. 多元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美國式 民主主義概念과 그 당시 미국의 教育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존 듀이의 教育哲學이 1945년에서 1960년의 全期間에 이르는 教育再建의 노력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韓國의 民主主義教育의 도입이 外生的 要因에 의해서만 좌우되었으며 따라서 이땅에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었다는 생각은 과장된 속단이다. 均等한 교육을 통해 階級을 타파하고 민족중흥의 基盤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實學派의 民本主義思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開化期의 선구자들 사이에서는 천도교에서 독립신문에 이르기까지 女性에게도 教育機會를 마련해 줌으로써 差別主義의 桎梏에서 解放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었다. 韓國 최초의 女性教育機關인 梨花學堂은 비록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平等한 教育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은 이미 自生的으로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公教育의 第一目標가 韓國民族의 '皇國臣民化'였던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간 중에도 教育을 통한 救國이라는 理念은 民族自立運動의] 核心이 된 民族教育 및 大衆教育運動을 낳았던 것이다. 外勢에 대한 저항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골자로 하는 民主意識과 不可分의 관계를 가졌고 비록 표현은 달랐다 하더라도 民主主義는 民族主義와 함께 日帝下 教育運動의 理念의 基盤이었던 것이다. 解放後 美軍政下에서 추진되었던 教育의 民主化作業이 널리 호응을 얻었고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후에도 거의 그대로 繼承될 수 있었던 것은 韓國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民主化의 政治的 構想과 教育에 대한 우리의 억제되었던 욕구 사이에 폭넓은 合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日本이 教育을 植民地支配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美國도 韓國에서 일본의 軍國主義 殘滓를 뿌리뽑고 사회의 民主化를 이룩하는 데 教育이 핵심적 役割을 담당해야 함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더우기 韓國에서 民主化를 推進해야 되었던 이유는 日本의 影響을 拂拭시킨다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地域에서의 共産

主義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었으므로 교육의 재건과 민주화는 遲延을 不許하는 작업이었다. 1945년 가을 美國의 政府가 韓國의 美國占領地域內의 民政行政業務에 관해 태평양지역 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최초의 訓令에도 이미 日帝植民地殘滓의 拂拭, 教育機關의 조속한 活動再開, 有能한 韓國人敎師의 기용, 美軍司令官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교과과정의 채택, 教育文化施設의 保護 등을 骨字로 하는 教育관계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美國은 韓國에 대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이 軍政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며 특히 教育問題 擔當官으로 지명된 록아드대위는 美國人 나름으로나마 教育에 대해 일가견을 가질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따라서 軍政은 韓國의 教育界指導者들의 參與와 諮問에 크게 의존했으며, 軍政治下 民政長官을 지낸 安在鴻, 보성전문교장 玄相允, 연희전문교장 백낙준, 이화여전교장 金活蘭, 중국에서 망명활동을 했던 鄭寅普 등 한국교육계 지도자들은 韓國教育委員會와 朝鮮教育審議會 등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그에 응했다. 연희전문교장을 역임했던 俞億兼은 군정학무국장으로, 美國 컬럼비아대학에서 존 듀이에게 受學한 바 있던 오천석은 학무차장으로 직접 教育재건에 參與하기도 했다. 朝鮮教育審議會 初等教育 分科委員會는 1946년 2월에 義務教育 要綱案을 마련했고 學務局은 이 안의 推進을 위해 1946년에서 1951년 사이에 適齡兒童 4백만을 收容하는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實行에 옮겨 지지는 못했다. 社會의 背景이나 男女를 불문한 教育機會의 均等과 初等教育의 義務 및 無償原則은 건국후 헌법 조항으로 명시되었으며 1949년 教育법이 통과됨에 따라 義務教育實施에 박차가 가해졌다.

教育機會의 확대와 함께 해방후 教育의 民主的 再建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教育內容의 쇄신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教科課程의 개혁과 함께 教科書의 편찬이 추진되어야 했고 유능한 교사의 採用과 施設의 확충이 필요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敎師의 確保와 訓練은 教育재건의 成敗에 關鍵이 될 것이었다. 해방 당시 日本人敎師들의 비율이 初等教育에서

30%, 中等教育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들이 남기고 간 空白을 메꾸는 일이 시급했으며 教師들에게 교육에 대한 새로운 概念을 불어 넣어주고 民主的 原理에 입각한 教授方法을 체득시키는 일은 더욱 더 끈질긴 努力을 要하는 일이었다. 軍政廳 文教當局은 즉각 그 일에 착수했다. 1945~6년 겨울에 이미 서울에서는 서울의 初中等敎員을 대상으로 하여 民主敎育理念과 새로운 教授法에 관한 강습이 개최되었으며, 1946년 여름강습에는 오천석이 듀이를 비롯한 美國의 敎育理論을 紹介하였다. 그 강의를 基礎로 하여 출판된 그의 '民主主義敎育의 建設'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美國式 敎育理論과 方法을 紹介하는 기본 안내서의 구실을 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韓國에 대한 美國의 敎育援助計劃의 일부로 1948년 여름에 설립된 中央敎員訓練所에서 열린 강습회였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M.S. Pittman을 소장으로 하고 있던 이 訓練所의 강사진 20명은 전부가 美國人 敎育專門家들이었으며 교원강습의 목적은 체험을 통해 民主主義를 파악시키는 方法을 傳達하는 데 있었다. 전통적인 敎師中心學習 대신에 集團討議와 問題풀이 學習, 實驗, 實習, 學級生活, 學生의 自治活動 등을 활용하는 敎育方法을 體驗的으로 習得하게 유도하는 이 강습은 受講者들에게 경이에 가까운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중앙교원 훈련소의 訓練過程을 직접 거친 사람들의 수는 567명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다. 실제로 각급 學校에 學生自治會가 組織되었고 課外活動이 장려되었으며 교사들은 生活指導를 통한 敎育으로 在來式 敎師中心敎育方式을 보완해야 되었다. 中央敎員訓練所가 閉所된 뒤에도 敎師再敎育講習은 文教部만 아니라 각종의 단체가 주관하는 가운데 계속 개최되었다. 6·25 이후인 1952년에서 1955년 사이, 美國의 援助가 敎育을 포함한 모든 分野에서 戰後의 복구사업에서 유효유가 되고 있을 시기에는 또다시 美國의 敎育使節團이 주축이 되어 서울과 부산에서 체계적인 敎師再敎育이 實施되었다. 1956년에는 피바디 師大 敎授團이 來韓하여 敎師

養成 및 再教育을 위해 技術援助와 指導를 제공했으며 그후로도 계속 파바디 師大出身 한국교육학자들은 韓國의 教育行政과 教育學界에서 큰 몫을 擔當하게 되었다.

美軍政下에서 추진된 民主化를 위한 教育再建計劃案은 1946년 여름까지 해서 이미 그 基本骨格이 잡혔던 것이며 1948년 政府의 수립과 뒤따른 教育법의 채택 이후로도 1961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 基本방향에 變化는 없었다. 教育機會의 확산을 위해서 初等教育의 無償義務教育計劃이 수립된 이외에도 日帝時代의 複線制學制 대신에 6-3-3-4의 單線制學制가 도입되었다. 우선 시급한 한글교육을 위해 國語敎本들이 마련되었으며 文盲退治를 위한 成人教育委員會를 조직하여 里와 洞을 단위로 國文講習會를 실시했다. 그러한 문맹퇴치운동의 결과 軍政 3년 동안에 약 250만 명의 文盲者가 퇴치되었으며 解放 당시 78%였던 문맹율이 정부수립 당시는 42%로 줄었다. 또한 학령을 초과한 未就學兒童을 위해 市, 邑, 面 또는 里, 洞, 工場, 會社, 社會團體 등이 主管하는 公民學校設置要綱도 마련되었다.

教育內容과 方法의 制定과 改編過程에서도 軍政下에서 추진되었던 教育民主化의 方向이 1950년대까지는 계속 유지되었음이 나타난다. 美軍政은 1945년 9월에 “日帝殘虐의 拂拭, 平和와 秩序의 維持, 生活의 실제에 적합한 知識과 技能의 練磨”를 目標로 하는 기본교육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그러한 취지하에서 國民學校에서는 國語, 歷史, 地理, 算術, 理科, 音樂, 體育과 함께 民主市民教育을 위한 公民科目을 따로 넣을 것을 발표했다. 한글교육이 시급함을 감안해서 下級學年에서는 國語와 算數時間을 많이 배정했으며 上級學年에서는 理科의 비중을 높였다. 教育을 통한 社會의 民主化라는 基本 방침에 맞추어 基礎學力 伸張과 生活에 실제로 필요한 教育에 역점을 두었으며 학생들의 協同的 參與를 장려하는 단원학습방법이 紹介되었다.

美軍政當局이 서둘러 마련했던 教科目編制와 教授要目은 그후 教育審議

會 10개 分科委員會에 의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일부 보완되고 修整된 형태로 실행에 옮겨졌다. 1946년에 확정된 教授要目的 특색은 '弘益人間'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애국 애족의 강조와 교과지도 내용의 상세화에 있었다. 그러나 1949년 教育法이 制定된 후에는 종래의 교과과정이 弘益人間의 理想을 理念으로 하고 自我實現과 民主的 福祉社會의 建設, 국제평화의 유지에 寄與할 수 있는 교육의 실시에 부적합하며 우리의 교육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教科의 內容이 학생들의 능력에 비추어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古踏의이라는 비평도 나왔다. 문교부는 6-3-3-4學制를 확립한 후 곧이어 教科課程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작업이 중단되었다. 1954년 백낙준 문교장관 아래서 드디어 文敎部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師範學校 教育課程時間配當基準令”을 새로이 공포하였다. 새로 마련된 교과과정의 특징은 그때까지의 지식중심의 교과과정을 止揚하고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 技能, 態度, 習慣 등을 길러주는, 학생들의 生活中心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었으며 문교부가 마련한 教科課程令은 '基準'에 불과한 것일 뿐 교과와 구체적 내용의 구성권은 학교 및 교사들에게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을 두어 학생 각자에게 適性이나 趣味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融通性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1954년의 교과과정의 개편은 軍政初期부터 教育再建을 위한 努力의 바탕이 되어 왔던 民主主義 教育哲學으로의 환원 또는 재천명을 의미했다. 6·25 이후 더욱 긴밀해진 韓美關係의 일반적 맥락속에서 美國의 進歩主義 및 實用主義 教育哲學은 다시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II. 教育의 土着化와 民主主義教育의 實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解放, 그리고 6·25 이후 한국의 教育再建努力의 뒷

받침이 된 것은 미국사회의 多元主義的 民主主義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進歩主義, 實用主義 教育哲學과 方法論 및 미국의 財政的·技術的 지원이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外來的 教育哲學과 理論을 受用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論議가 그 당시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教育理念을 내세워야 되겠다는 趣旨에서 채택되었던 것이 ‘弘益人間’의 理念이었다. 우리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民族自立과 統合의 過程가 民主化의 過程에 못지않게 절박한 것이었으며, 民主主義教育도 民族的 自尊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초대 문교장관이었던 안호상이 一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民主主義 民族教育을 主唱한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였다. 軍政이 終熄되고 남한에서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후에는 教育제도의 土着化가 이루어졌으며 土着化되는 過程에서 民主主義教育은 여러가지 벽에 부딪치게 되고 教育의 民主化를 통해 民主社會建設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趣旨가 형식적으로 계속 천명되는 가운데서 내용적으로는 教育이 크게 變質되고 歪曲되는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래 教育의 民主化의 내용으로 크게 강조되었던 원칙들은 個性의 尊重, 自律性의 伸張 그리고 教育機會의 擴大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뚜렷한 성과가 거두어진 것은 教育機會의 擴大에서 뿐이었다.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사변 이후의 어려운 물질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義務教育의 實施는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각급 학교의 就學率은 놀라운 속도로 높아갔다. 출세의 지름길로서 教育에 대해 거는 한국국민의 전통적 기대가 單線制學制의 선택에 의해 더욱 鼓舞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教育機會의 擴大와 教育年限의 延長이 教育機會의 質의 均等과 어느 정도 일치했는가에 관해서는 論亂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階層別, 性別 또는 다른 어떤 근거의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 單線制學

制下에서의 教育人口의 끊임없는 증가는 바로 그 사실 자체로서 社會의 民主化를 위한 가장 중요한 與件의 造成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單片的으로나마 民主主義의 理念과 實際에 대해 들어보고 접해 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아직도 家父長制 文化傳統이 지배적이었던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말까지의 한국의 社會現實속에서는 매우 큰 啓蒙的 的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으며, 언젠고 發現의 기회를 찾게 될 民主的 儀式的 싹이 심어짐을 뜻하는 것이었다.

民主主義教育의 內容의 擴充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결과는 훨씬 덜 鼓舞的이었다. 教育理念의 不在 내지는 빈곤에 우선 문제가 있었으며, 표피적으로 내세워지는 口號나 原則과 實踐 사이의 乖離는 韓國의 教育에서 痼疾的인 병폐가 되었다. 社會의 內的 要求로 볼때 民主主義와 民族主義는 教育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두 개의 理念的 支柱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 개념을 한국의 特殊한 文化 전통과 역사적 여건에 알맞게 表現하고 解釋, 適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教育의 本이념으로 채택된 '弘益人間'의 개념은 教育을 위한 具體的 指針이 되기에는 너무도 漠然하고 抽象的인 것이라 함이 그 이념의 채택 당시에서부터 지적되었었다. 홍익인간을 本이념으로 받든 教育法은 따라서 教育질차나 方法 등에 관해 그 이념과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具體的인 指針도 제시하지 못했다. 民主主義教育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外生的 發想에서 출발했었다는 사실보다도 內的 要求를 적절하게 收斂하여 表現할 만한 철학적, 사교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教育을 통해 韓國의 民主化를 촉진시키려 한 美國人들이나 그들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국인 教育계 指導者들이 信奉했던 教育哲學을 개인의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實用主義 教育哲學이었다. 그러나 逆說의 이제도 경험을 증시하는 教育哲學에 기초한 教育制度와 方法이 생활경험이 전혀 다른 異質的인 社會에 위로부터 外生的으로 소개되어야 했으며 한국의 生活體驗에 기초한 어떤 철학체계와도 接木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軍政時代와 大韓民國 初期에 教育진설에 參與했던 人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留學한 經驗이 있거나 아니면 日帝時代부터 進보주의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던 人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教育者들은 日帝治下에서의 教育이외에 다른 經驗이나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人들이었으며 通譯을 통해 進행되는 短期講習을 통해 美國式 教育方法을 채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教育施設의 貧困, 過密學級, 過重한 學生指導負擔 등 때문에 실제로 學生들의 參與를 통한 教育이라는 教授方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했다. 여건이 未備한 속에서의 새로운 教育방법 적용의 시도는 종전의 教師中心學習體制에 비해 逆技能的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進學率의 향상과 함께 上級學校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자 知識爲主가 아닌 生活爲主의 학습은 내용 없는 口號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知識의 單片化만 가져왔다. 또한 知識 이외의 다른 教育적 성과에 대해서는 評價尺度조차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방된 生活中心教育 原理와 教育現場의 事情사이의 괴리는 더욱 심해졌다.

교사와 學生의 자발적 參與를 중시하는 民主的 教育의 土着化를 방해한 또 하나의 중요한 原因으로는 國家權力の 肥大化에 따른 教育行政體系의 官僚化를 들 수 있다. 문교장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教育指針의 방향이 조정되는 현상은 이미 초대 문교장관이었던 안호상 시절에서부터 나타났었다. 군정시대에는 教育행정가들 뿐 아니라 社會各界의 지도급 人사들이 教育문제에 심의에 대거 參與했으며 건국초기에만 해도 教育문제는 政治나 經濟問題에 못지 않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教育政策의 결정은 사회 各계 的 지도층 人사들이나 국회에 의해 신중하게 다루어졌었다. 그러나 6·25 이후 戰後의 國家再建이라는 엄청난 과제앞에서 教育問題는 점차 政府나 社會의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教育과정의 制定이나 改編은 國家적 관심사가 아니라 文교부 的 獎學室이나 編修局의 소관이 되었다. 민족의 百年大計를 설계하는 작업이 技術官僚들에게 맡

겨지는 추세가 분명해진 것이었다.

一般行政의 요구에 교육적 고려가 종속되는 현상은 教育自治制의 실패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육자치제의 원칙은 이미 軍政時代에 채택이 되었었고 美國式 民主主義教育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전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현의 留保로 教育自治制도 시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가 1952년에 市, 面, 道議員 總選舉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教育自治制는 시행 초기부터 綜合行政의 原則을 내세우는 내무부 관료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고 일선의 교육자들이나 학부모들의 意思의 표현이나 자율적 참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채 형식적 기구만 만들어 놓는 自治制란 불필요한 부담만 늘린다는 근거에서 內部로부터의 비판과 폐지론도 대두했다. 教育財政의 貧困, 行政官僚 및 國民全般의 認識不足, 그리고 一貫性 없는 行政體系 속에서 教育稅의 부담만 안게 된 학부모들은 教育위원회 설치로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實質的 參與와 寄與는 공식적인 자치기구보다는 오히려 私親會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형식상으로는 教育自治制가 1961년까지 유지되었으나 地域民들의 實情에 맞는 生活中心의 教育을 창출해 낸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춘 효능은 전혀 창출해낼 수 없었다. 美國式 民主主義教育의 土着化를 돕기 위해 1953년부터 1962년까지 다시 韓國에 머물면서 中央教育訓練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美國教育使館團도 생활과 단절된 教育內容 및 非民主的 傳統의 뿌리깊음이 아직도 한국의 교육이 안고 있는 根本的인 문제라 지적했다. 교육이 教育을 통한 社會의 民主化라고 하는 목적에서 보다는 行政의 便宜에 맞추어 다루어지고 생활중심의 교육이란 보고용 지침으로만 남고 실제로는 종래의 權威主義的 教育方式이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경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더해지는 趨勢였다.

民主化를 향한 노력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침은 물론 오히려 逆潮 現狀마저도 보인 것은 비단 教育에만 局限되었던 현상은 아니었다. 남북

한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反共이 정치적 절대가치로 부각되던 분위기 속에서 敎育만이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는 餘地를 확보받을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休戰後 物理的 再建事業의 긴박함 앞에서 敎育에 투자되는 몫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美國인들이 韓國의 敎育再建에 유달리 관심을 보였던 것은 新植民主主義의 理解關係의 表出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西歐의 民主主義가 한국의 敎育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미국에 대한 南韓의 文化的, 精神的 從屬이었을 뿐 사회의 진정한 民主化에 寄與하기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全面的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유학생들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留置함으로써 文化的, 敎育的 再生産을 도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됨이 물론이다.

이러한 評價에는 상당한 정도의 妥當性이 인정된다. 美國의 절대적 영향 아래서 추진된 敎育民主化의 작업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본래의 목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美國中心의 世界觀을 韓國社會에 傳播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解放直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民主化道程에 비추어 볼 때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 敎育에 미친 영향,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美國의 進歩主義 敎育哲學으로 그전까지의 權威主義的 敎育概念과 日帝時代의 國家主義的 世界觀을 대치하려 했던 노력이 民族의 自立과 自足이라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어야 할가에 대해서는 反論의 여지도 크다. 敎育은 항상 政治的 狀況의 變動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被動的 立場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民主主義敎育의 理論과 實踐을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개인 人格의 尊嚴과 自主를 강조하고 理念보다 生活中心의 敎育觀을 도입하려 한 노력은 政治와 敎育 간의 그러한 主從關係에 逆轉을 가져오기 위해 現實的 制約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으로 社會의 民主化에 投資해 보려는 劃期的인 試圖가 아니었는가도 생각할 수 있다. 敎育을 민주化의 關鍵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지도급인사들이 모두 그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졌으며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教育者, 被教育者의 人格的 尊嚴과 自主성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에 뿌리박은 教育을 理想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함은 1961년 이후 教育정책의 기본방향이 急旋回한 후에 빚어진 教育의 退行現狀을 보면 특히 분명히 알 수 있다.

Ⅲ. '韓國의 民主主義'와 教育의 退行

5.16 군사쿠데타와 1972년의 維新體制宣布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이념적으로 볼 때 그것은 解放以後 그때까지 韓國의 社會를 지배해 왔던 미국의 영향에 대한 民族主義의 反擊이었다. 反共이 마치 大韓民國의 존재이유인 듯 내세워지는 南北韓間의 尖銳한 대립관계속에서 試圖된 政治的 民主化의 虛構性 및 그러한 시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混亂과 非能率을 西歐의 民主主義理想 自體의 缺陷인 듯 速斷한 군부에 의한 권력장악은 단순한 권력집단의 교체라 아니라 軍國主義의 色彩가 濃厚한 民族主義的 이데올로기에 의한 서구의 自由民主主義理念의 대체를 의미했다. 1968년에 새로 제정된 國民教育憲章은 이러한 理念的 變革을 教育을 통해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個人的 尊嚴과 自由 대신에 愛國愛族, 國家建設에의 寄與와 奉仕가 강조되었으며 反共意識의 주입이 '韓國的 民主主義' 教育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교육에 미치는 現實的 影響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國民教育憲章의 채택과 維新政治의 선포는 教育의 완전한 政治道具化를 의미했다. 표면적 구호로는 全人教育이 강조되었으나 실제로는 教育이 가지는 哲學的 意味에 대한 반성이 전혀 배제된 속에서 被教育者는 人格의 主體로서 보다는 經濟發展과 동일한 협소한 의미로 해석되는 國家發展의 動力을 제공하는 자원으로만 파악이 되었다. 教育적 고려가 政治, 經濟的 고려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러한 경향은 教育行政의 고도의 中央集權化와 官僚化, 教育課程

의 改編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새로 기용된 編修官들이 짧은 기간동안의 작업과정을 통해 만들어 1963년에 공포한 교육과정 개정령은 反共意識強化와 生活向上에 필요한 知識과 技能의 능률적 배양에 역점을 두었다. 하급학교의 교육을 敎科活動과 학생들의 自治活動을 근간으로 하는 特別活動 두 영역으로 구분했던 종전의 교과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을 敎科活動, 反共, 道德活動, 特別活動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反共, 道德敎育科目을 필수로 부과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生産敎育, 技術敎育, 科學敎育이 특히 강조되는 가운데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채택되었던 單線制學制는 실질적으로 人文系와 實業系를 구분하는 複線制로 대체되었으며 단기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보다 긴 안목의 哲學的 고려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대원칙들이 默殺되어 버리는 現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3년에는 第三次 敎育過程令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그때까지의 生活中心敎育이 兒童의 生活經驗이나 興味를 강조함으로써 敎育의 質的 低下를 招來하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根據한 것이다. 그것은 한편 1957년 '스푸트닉'의 衝激 以後 美國에서도 일고 있던 生活中心敎科에 대한 反省의 思潮와도 관계된 것이지만 그보다도 維新體制의 선포를 正當化하는 政治敎育을 강화하고 學問中心 敎科過程의 導入을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人的 資源의 培養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도에서 推進된 것이었다. 국민학교에서도 주당 수업시간이 늘어났으며 학생들의 自治活動은 極小化되었다. 敎育에서 自律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退色하는 속에서 학생들의 반장선출조차도 選舉制에서 敎師에 의한 任命制로 代置되고 敎育활동의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肥大해지는 文敎行政部署들에 의한 上命下達式的 統制가 강화되었다. 일선의 교사들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진 敎育者이기 보다 末端 行政官僚 같이 취급되고 敎育행위에 투입될 정력이 보고서 작성 등의 불필요한 사무에 소모되어야 하는 추세가 계속 강화되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人力培養과 維新, 反共理念의 注入을 기본목표로 하

는 教育政策이 그 基調에 '있어서 西歐의 民主主義의 教育哲學에 대한 全面的 排擊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社會民主化에 미친 그 영향이라는 척도로 본다면 그 結果에는 매우 矛盾的인 面이 나타난다. 經濟의 급속한 成長과 그에 필요한 人力培養에 대한 強調, 高교평준화 정책의 채택 등은 教育인구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教育에서의 엘리트즘의 退潮를 촉진했다. 經濟에서 分配體系의 不平等이 深化된 것과는 對照的으로 教育에서는 實質的인 社會平準化의 基盤이 강화된 것이다. 다른 한편 維新體制와 그에 뒤이은 第五共和國 아래에서의 모든 형태의 自由言論에 대한 심한 統制와 彈壓은 팽창하는 知識人層의 反體制化를 촉진시켰다. 생활에 뿌리를 두지 않은 西歐의 民主主義理念이 教育을 통해 위로부터 說破되었던 1961년 以前의 狀況과는 對照的으로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이 公式으로 排擊되는 狀況에서는 생활의 체험에 뿌리를 둔 강력한 民主意識이 솟아날 수 있는 現實的 與件들이 마련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영향 아래서 導入되었던 民主主義의 形式에 韓國的 體驗을 바탕으로 한 內容이 담겨진 것은 美國의 영향에 대한 民族主義的, 軍國主義的 反擊이 일고 있던 維新體制下에서였으며 그러한 추세는 1980年代에 계속 강화되었던 것이다. 韓國的 體驗에 뿌리를 둔 民主主義의 概念이 西歐의 體驗을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主義哲學과는 氣質的으로 다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反西歐, 특히 反美的인 方向性을 가진다는 것은 西歐의 民主主義가 우리 教育에 미친 가장 逆說的인 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